

민주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부패 정당' 부각... 악재에 곤혹

민주 '전당대회 돈봉투' 송영길 구속... 법원 "사안 중해" 내년 총선 앞두고 대형악재... 현역 의원 소환 시작될 듯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결국 구속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총선을 4개월가량 앞두고 대형 악재를 마주하게 됐다. 우리의 목소리가 나온다.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검찰이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칫 부패 정당 이미지가 공고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돈봉투 사건에 대한 가시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송 전 대표가 구속된 주요 혐의 중 하나는 그가 2021년 전당대회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과 공모해 2021년 4월27~28일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구속으로 돈봉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송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구속에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송 전 대표가 지금은 탈당하신 만큼 개인의 몸"이라며 "민주당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별 의

원 관련해서도 이름들만 거론됐지,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확인된 건 없다"며 공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하지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2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순차적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더 나아가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대형 악재를 마주하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의원들은 도덕성이 타락한 부패정당 이미지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불안감을 내비쳤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돈봉투 사건이 총선을 앞둔 우리에게 남아있는 '아킬레스건'이라며 "검찰이 선거 국면에 야금 야금 의원들을 소환하면서 민주당 이미지에 먹칠하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악재가 예상되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상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이 지난 5월 돈봉투 사건 등으로 인해 당의 혁신안을 발굴하고자 쇄신 의원총회까지 열었지만 그 이후로 당 차원의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기보다 의원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손쉬운' 방향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결국 (돈봉투 건은) 검찰 수사에 맡기는 걸로 돼 버렸는데 우리가 스스로 정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체 조사도 하고 국민에게 먼저 밝힐 건 밝히는 게 좋을 것"이라며 "지금은 의원들이 각자 그걸 소명하고 본인이 돌파하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 당은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는 게 국민들에게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당 차원의 '사법리스크'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당 지도부 차원에서 자체 조사 등을 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본인이 사법리스크에 연루돼 있는 만큼 결단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수도권의 한 다른 재선 의원은 "돈봉투 연루 의원들은 검찰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나"라며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때도 조사는 커녕 김 의원을 감싸기만 하다가 끝났고 측근이면 과실지사 사건도 아무 문제 없이 되고 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 당하면 실수였다"고 말하는 등 편하게 생각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다만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소 등이 이뤄져 사건의 실체가 명확해지면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배제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 초선의 의원은 "수사가 진행되면 결국 총선 전까지 판결이 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소환이 있고 기소까지 있을 수 있으니 결국 공천 과정에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당에서 조치를 취하는 걸로 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이야기하기가 너무 이른 게 20여 명이라는 적지 않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그 안에 성향이 너무 다양하다"며 "최소한 기소 여부에 따라서 구분이 될 거 같고 우리도 그에 따라 판단을 달라라고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당도 공천 배제 등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희면기자

황예원 광주 북구의원, 마약류 관리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예방사업 당부

청소년·청년뿐만 아니라 보호자·가족 대상 교육 필요



광주 북구의 회 황예원 의원은 (운암1·2·3동, 동림동)은 19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마약범죄 확산과 관련해 마약류 관리 강화를 촉구하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마약 예방사업의 추진을 주문했다.

황예원 의원은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마약사범은 2020년 751명에서 2023년 9월 기준 1,14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입수된 마약류가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였고, 북구의 몰수마약류 또

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로, 종류 역시 양귀비·대마·필로폰 등으로 더욱 다양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몰수마약류 관리 주체인 보건소에서는 몰수마약류의 인계·인수, 보관, 폐기 등 모든 절차에 대한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하고 CCTV, 24시간 감시 장치 설치 등 강력한 보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년 중독 예방인식 증진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형식적인 내용 전달에 그치는 교육·홍보만으로는 확실한 마약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청소년과 청년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추진을 검토하고, 한정된 인력과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지역의 실정과 대상에 맞춤형 효과적 예방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슬비기자

안철수 "이낙연, 여당 와달라...바른 삶 살며 언행 신중한 분"

"새 당 만들고자 하지만 함께 안할 것"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을 탈출하시고 여당으로 오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두 부류"라며 "한 부류는 김남국, 윤관석, 강래구 등 돈 관련 사건으로 나오신 사람들인데, 유유상종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한편으로는 이상민, 양향자, 금태섭, 조정훈같이 이재명과 개팔들 독재정당에서 탈출하신 분들이 또 한 부류"라며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마라는 말이 어울리는 분들"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낙연 대표님은 평생을 민주주의를 지켜오고 바른 삶을 살며 언행이 신중한 분으로, 현재의 위치에 가득찬 더불어민주당과 맞지 않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고자 하지만, 형제처럼 고난을 함께해 온 분들도 내년 총선 당선 때문에 뜻을 함께하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에 오셔서 큰 뜻을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며 "저도 함께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수권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